

# 광주, 제대로 대처 못해 고속철 제외... 뉴딜사업 재생 모색

## 존치·개발 논란 광주역 쇠락과 활성화 계획

지난 2014년 호남고속철도 완전 개통 이후 광주 송정역이 호남의 중추역으로 자리를 잡은 반면 광주역은 보통역으로 전락하면서 존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의 하루 이용객수는 1만8762명(주말 2만2504명)인데 반해 광주역은 1193명(1522명)으로 집계됐다.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시설 부족과 미흡에 몸살을 겪고 있는 광주 송정역사, 유동인구의 급감으로 비어있는 광주역사는 '변화'와 '쇠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 발전과 성장의 상징, 광주역=광주역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송정리에서 광주와 담양으로 통하는 전남선(또는 광주선)의 개통과 함께 탄생했다. 이후 광주~남평~화순~보성~발교~순천~여수 등 광주와 전남의 주요 도시들을 잇는 광역선이 1930년 개통하면서 철도시대를 열었고, 광주가 전남의 주축도시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광역선은 1938년 국유화되면서 그 노선 명칭이 경전서부선으로 바뀌고, 1944년 말 전시체제 하에서 몰타 부족에 시달렸던 일제가 광주~담양 구간을 기존 철로를 철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자리에서 1969년 7월 복구 중흥동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다. 이후 40여년 간 송정역과 함께 광주의 핵심교통시설로 위치했다. ◇광주역에서 고속철 사라진 배경=고속철도 도입을 앞둔 1990년대 후반 지역 내에서 광주역

### 1922년 탄생한 광주 핵심교통시설 하루 이용객 송정역 10%도 안돼 광주시 국·시비 1000억원 투입 4차산업 전진기지 등 조성 청사진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동구·북구는 '반대', 서구·광산구는 '찬성'하는 등 지자체별로 극명하게 이견을 보이면서 광주역·광주송정역 모두를 유지하는 이원화 방점이 수립됐다. 그러나 2014년 말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고속철도 정차역은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됐다. 정부 방점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 2006년 8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기본설계를 앞두고 2007년 6월 광산구 사전사업설명회, 같은 해 7월 광주시 토론회 등 단 2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역을 정차역에서 제외한 기본설계 계획노선이 결정됐다. 그 뒤 2009년 초부터 1단계(충북 오송~광주송정) 구간의 공사기간을 2015년에서 1년 앞당기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 변경이 이뤄졌으나 이 때도 광주역 문제는 거론되지 못했다. 늦게나마 학계에서 일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문제에 대해 적극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쇠락하고 있는 광주역을 존치하고 새로운 기능을 더해 지역 거점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부부처의 결정에 의존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시기도 놓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에 광주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어필해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

라며 "일원화할 수밖에 없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지원받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광주역과 그 주변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뉴딜에서 추가하는 광주역 새로운 기능은=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최대 1000억원이 투입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광주

역의 새로운 모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역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다. 향후 기차 여행의 대중화, 달빛내륙철도 개통 등을 대비한다는 측면이다.

광주시의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안)'에 따르면 광주역 유희부지는 '아시아 신비즈니스의 출발지, 기적소리 광주역'을 비전으로 삼아 4차 산업 전진기지 조성, 호남권 신경제중심지 조성, 아시아문화 관련 조성 등을 목표로 삼았다. 240만3000㎡의 부지에 푸른길 연계 하이테크 파크, 아이디어공작소, 드론광장, 쇼펜센터, 어린이·청소년직업체험시설, 자동차에프터마켓, 영화관 등 상업시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센터 등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역 지하에 광주역 광장과 전남대 후문을 잇는 언더패스(Under Path)를 설치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광주역 남북을 잇는 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광주역의 경우 역사와 철로는 이설이 불가능하고, 사업지구 북쪽의 차량기지 이전의 경우 최소 5~6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차량기지 이전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좁다는 것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소화물·주차장구역(1.1만㎡) 이외에는 적정부지가 없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좁아 사업의 조기 착수가 어렵고 초기에 성과를 내기도 곤란하다는 점도 과제다. 시는 코레일과 광주역 유희부지에 대해 동시 출자해 1단계를 개발하고, 현재 비어있는 광주역사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 문화예술 등의 공간으로 복합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바른미래당 전주서 첫 최고위원회의... 호남 쟁탈전 가세

### "지역감정 자극 정치 심판율" 민평당에 강경 발언 쏟아내

바른미래당이 설 연휴 직후인 19일 창당 후 첫 공식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며 호남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히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인 민주평화당을 겨냥, "호남의 진심을 배신했다"는 등의 조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동시에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바른미래당의 이 같은 행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평당을 견제하고 멀어저기는 호남 민심을 되찾겠다는 구상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공식 합당 이후 첫 현장 최고 위장소를 호남으로 택한 것도 이 지역 민심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을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됐다. 박 공동대표는 회의 직후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열어 "호남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

고 진심을 배신하는 것은 바로 폐쇄적, 고립적 호남을 주장하는 민평당에 있다"면서 "지역주의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북도민의 가치가 '대도무문'(大道無門)·큰 도리나 정도에는 거칠 게 없다'이어서 분명히 호남은 우리를 평가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역감정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영·호남민들의 민도가 바뀔 때가 됐다"며 "민평당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를 한다면 전북도민들이 분명히 심판을 줘야 한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은 송헌전 전북지사와의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터진 데 따른 지역민의 불안감을 다독이는 데 주력했다. 송 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남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북이 울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자, 박 공동대표는 "얽잡이 초상집 분위기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잔치를 하지 못한다"고 공감을 표실했다. 앞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했다는 민평당의



유승민·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9일 전북도청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면서 "지역주의에 기반 정당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관영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평당은 민주당의 그늘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바른미

당을 자주 자유한국당과 붙이면서 호남에서 득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실제로 호남에서 여론조사를 해 봐도 민평당보다 바른미래당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민주, 바른미래 비판 자제하며 '협력' 탐색

### 대북·경제정책 국민의당 보다 우경화...관계 설정 고심

민주당이 제3당인 바른미래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론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에서 신생 바른미래당이 과거 국민의당 수준의 협력 기조를 보일 것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정체성이 국민의당보다는 바른정당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여론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대북 정책에서 입장차 감지된다. 바른미래당의 정강 정책에서 햇볕정책이 빠지는 등 전박적인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이 과거 국민의당보다 훨씬 보수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기조를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회 운영과정에서 한국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과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당내 호남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의 우경화를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원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과 보조를 맞출 경우, 민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호남의 의원들은 진보 성향의 지역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당의 우경화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민주평화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인사 문제나 예산 등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민평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평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임용욱기자 tuim@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